

사설

시간 끌기와 은폐, 모르쇠라는 나쁜 병폐

시간 끌기와 은폐, 모르쇠라는 나쁜 병폐
2021년 발생한 완도군 코로나 예방접종 센터 부정접종, 그리고 그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을 수사해온 완도 경찰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견제와 행동 없이는 군 행정과 완도경찰의 법 집행 실태가 바뀔 리 없다는 점을 여실히 느낀다.

그간 완도경찰은 행정조서, 자체조사결과보고서, 굿모닝완도의 취재기사, 관련 참고인 및 피고발인 조사 등을 통하여 작년 6월 9일자 자체조사결과보고서는 존재하지 않고, 행정조서의 내용과 판이하게 ‘전남도청의 구두 지시’로 기재한 것은 허위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송치 결정문에는 “감사팀 주무관이 주관적으로 ‘도청은 완도군의 상급기관이므로 해당 주무관이 도청 주무관의 의견을 지시(명령)

으로 받아들이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두 지시로 기재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제 부정접종과 허위공문서 작성 당사자인 보건의료원 모 팀장과 감사팀 전 주무관은 피고발인으로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게 과연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일까? 경찰의 부당 편파 수사가 큰 잘못이긴 하나 그 배후에 있는 직무유기자들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피해를 입고도 저항하거나 따지지 못하고 침묵하는 완도 시민들이 아닐까?

머슴에게 일을 맡겼다가 머슴의 잘못을 알고도 꾸짖지 않는 주인들 덕에 완도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생각이 찾아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주인된 자가 주인된 자의 언행을 보이지 않으면 그는 이미 주인이 아니다.

완도군립도서관의 한국도서관상 수상이 반갑다

완도군립도서관이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한국도서관상’ 단체상을 수상했다. 2014년 신지 햇살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2021년 고금 고사리작은도서관 개관까지 지속적인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1읍면 1도서관 운영’ 목표를 달성하여 섬 주민 독서 갈증 해소와 독서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 상이 그리도 반갑고 고마운 까닭은 여러 이유에서다.

언젠가 연말과 연초라면 으레 완도군 청사 창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현수막으로 도배되던 때가 있었다. 돈으로 매수했던 힘으로 뺏아왔건 줄만 하나까 상을 주었을 것이다. 지금처럼 청렴도와 민원서비스 등 정부 기관이 평가하는 행정의 질이 최악인 완도군에 어떤 단체인들 아무렇게나 상을 주겠는가. 최근 인근 이웃 시군들이 앞 다투어 상을 탈 때 내내 침묵하다가 완도군이 이번에 도서관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서관상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도서관의 현 실정을 알기에 더더욱 그렇다. 완도군 공무원이 1,000명이 넘어갈 때 사서직은 한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그나마 걸핏하면 읍면 지역으로 보내 사서들이 일반직 업무를 수행하기 일쑤다. 심지어 개

발팀이나 농어업팀에 배치하기도 한다.

이번 단체상 수상 이유가 읍면 작은도서관의 운영 덕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건물 지어 품만 잡으면 그걸 어디에 쓸 것인가? 뿔뿔한 운영자를 키우고 교육해야 할 사람은 전문직 사서인데 완도군은 사서들을 일반 행정에 배치하지 않는가. 누가 있어 70대 노인이 운영자로 있는 도서관까지 살뜰히 살피고 지원할 것인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완도군이 큰상을 받은 것에 대해 기가 막히게도 기쁘고 고마운 것이다. 받을 수 없는 상을 받은 까닭이다. 이제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자명해진다.

최근 완도군 수산직 공무원이 업자들과 짜고 뇌물 1억을 받아 구속됐다. 올해도 전국 청렴도 평가도 역시 꼴찌를 면하지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도서관상이나 연속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올해 작은도서관 개관으로 이번 상을 받았다면 내년은 더 모범적인 운영으로 연속 수상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도 사서직 공무원은 읍면에서 삽질하는 대신 도서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다행하기를 바란다면 사서직 공무원을 충원해 읍면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켜 명실공이 섬의 두뇌로 양성해 가길 바란다. 해양치유산업 때문에 이 또한 어려운가?

기고

‘눈먼 보조금’ 기사를 보면서 완도를 걱정한다

지난 4월8일자 본보의 “눈먼 보조금...업자와 짜고 1억원 챙긴 완도 6급 공무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분통이 터져 이 글을 쓴다. 해수부의 수산사업자 보조금들을 보면 대부분 육해상의 어류양식업자나 가공, 유통 등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사업자들을 위한 보조금들로 집중, 부자를 더 부자 만들어 주는 보조금들이 대부분이다.

수산경영과의 22년도 2회 추경 317억 예산을 보면, 그 중 중량감 있는 보조금들은 위에 열거한 사업자들의 사업체 뒤편에 되는 보조금들이다.

필자는 기회가 되어 “눈먼 보조금...”으로 표현된 사업인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사업”이라는 김 공장 정수시설사업 진행 상태를 지근에서 지켜 볼 기회가 있었다. 당시 정수시설보조금 사업은 개소 당 3억원에 보조 60% 자부담 40% 조건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개소 당 5억원으로 상향되어 집행되는 것을 보고, 담당부서에 확인했더니, 모 사업체가 시설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수시설사업 사업비 원가분석자료?” 같은 것을 제출, 상급기관에 반영시켜 사업비를 늘린 경우라고 했다. 육상의 건축이나 토목사업들이 설계변경(?)을 하여 사업비를 늘리는 수법이 이곳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사업체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분 40%(3억원 사업비 중 1억2천만원)를 납품업체가 제공해주는 형식으로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느꼈지만, 차마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5억짜리로 둔갑했다. 5억짜리로 둔갑했음에도 애당초 3억짜리 시설과는 병반 달라진 것도 없었다. 관련자들은 자부담분 처리(?)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위와 비슷한 보조사업들 중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보급보조사업은, 수년 전부터 연간 수십억원씩 계속해 온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은 보조 80%, 자부담 20%가 대부분 이었고, 향간에는 똑 같은 시설을, 같은 시기에, 같은 업체가 개인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훨씬 싼다고 한다. 진짜 그런 거라면, 이 사업도 위 정수시설 사업과 같은 형식이었거나, 오히려 플러스알파가 더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은 계속되어 왔다, 향간에서는 진짜 이제야 알았냐며,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요지경 속이다.

김 가공공장, 어류양식, 치패양식, 수산물 관련 유통업자들은 그동안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사업자들 다수가 이미 지역유지(?)로 자리 잡았고, 잡아가고 있다, 이들



김 준 거
(굿모닝완도 시민기자)

에게는 작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십수억원씩의 보조를 지금도 해주고 있다, 이들은 경쟁하듯 비싼 외제차(?)에 지역유지가 되어가고 있다, 눈먼 돈(?) 덕분에 아닐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해수부나 전남도나 완도군이 집행하는 수산관련 보조사업들은 진짜 바다에서 전복이나 미역, 다시마 등을 양식하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실제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최종 양식어민들의 기자재나 치패를 사는 데 보조해주거나. 종묘를 사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보조해주거나 하여, 실제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며 생산을 해내는 어민들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내년부터라도 수산관련 보조사업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해수부를 설득시켜야 한다. 최 말단 어민들 중 대다수가 빚쟁이 아닌 어민이 없는 실정을 다 알면서도 이들은 방치하고,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보조사업들을 우선하여 집행하는 수산전문가 완도군수여셔야 되겠는가! 제발, 완도군의 정책들이 말단 최전선에서 결과를 일궈내는 일반 어민과 농민들을 더 보살피는 쪽으로 선회해 주기 바란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바뀌어야 한다. “눈먼 보조금.....?” 이것은 빙산의 일각임을 우리는 안다. 알면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고 삼킨다. 이제 깨어나야 한다. 중앙부처들 홈페이지 가면 주무관부터 장관까지 연락처가 공개되어있고, 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이나 주민 혜택 사업들이 공개되어 있고, 그 일들은 어떻게 하라는 지침들이 있다. 그러함에도 왜 우리들은 오라면 가고, 하라면 하면서, 시키는 데로만 하고 있을까? 스스로 매사 나에게 도움이 될 사업들은 우리 스스로가 지침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의 일이다.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러 갔더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첨부하라 했다. 나는 이의를 제기했다, “내가 왜 증명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느냐? 행정기관은 내부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직접 챙겨서 사용토록, 민원처리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의무 없는 문서를 첨부하라 하여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하느냐?” 했더니 알았다고 신청서만 받았다. 그 시간에도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서류를 떼 오라고 했다.

우리 지역의 일부 공무원 수준이다. 그래도 우리는 면서기가 오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믿어버린다. 나의 권리가. 나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까라면 까고 살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셨더라면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 신고서 및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해당업소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 뿐 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난시설은 긴급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비상구와 같은 피난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최원
(완도119안전센터)

소방서는 이러한 사태를 근절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장소에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

기고

모두 함께 만드는 ‘안전한 비상구’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화재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상황 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으로 인해 비상구가 막혀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병원 화재 등 화재 현장에서 비상구가 막혀있어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영업장에서는 비상구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창간 : 2021년 11월 10일 등록번호 : 전남,다00422



- 등록일 : 2021년 11월 2일
- 발행 : 완도언론협동조합
- 발행인/편집인 : 박남수
- 간별 : 주간 ■인쇄처 : (주)중앙일보 055)345-9712
- 발행처 : 전남 완도군 고금면 봉명111번길 15-13
- 연락처 : 061-553-1727 ■기사제보 구독문의 : wandopia@daum.net
- 구독료 : 1부 3,000원(우편요금 포함) 12개월 36,000원
- 온라인게좌 : 농협 301-5530-1727-11(예금주: 완도언론협동조합)

본지는 한국정기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과 주간신문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